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28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 수출경쟁력 강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공약 발표

- 전체 조달 금액의 1% 사용 가능한 ‘혁신구매 목표제’, 중소벤처기업 성장 뒷받침하기엔 역부족
- 현재 목표 1%에서 5%까지 확대,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신기술 R&D 결과물에 대한 공공구매 우선지원 확대 등 방안 제시
- 중소, 벤처기업의 디지털·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 촉진, 수출경쟁력 강화 등 기대효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발표했다.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과 수출경쟁력 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다중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30개 국가 인증과 특허를 취득한 한 벤처기업이 국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었다”고 밝히며, “마침 시작된 정부의 혁신조달 역점 정책에 따라 조달청 납품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다”고 혁신제품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정부에서는 혁신성, 공공성이 인정된 국내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규모는 정부, 공공기관 전체 조달 금액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해 혁신구매목표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혁신제품구매’를 현재 1% 수준에서 임기 내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조달이 창업·벤처혁신제품의 국내시장 안착을 도움으로써, 수출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핀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자국 혁신제품의 첫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제품과 신기술 R&D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우선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에너지전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가 수의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 수준의 실적을 보장해 수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로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판로개척의 마중물을 붓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확대가 공공조달시장의 기존 패러다임을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의 기업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이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조달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도 목표다. 기술혁신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최첨단기술에 기반한 참신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사용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21년의 경우 물품 구매액 45.8조 원의 1.2%인 5,477억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끝)

[붙임] < 설명자료 >

- 전체 공공조달 규모 : (2019년) 160조 원 → (2020년) 176조 원
 - 2020년 물품구매액(64.5조 원)의 1.2% 적용시 혁신제품 구매 7,740억 원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1-9월 |
|---------------|-------|-------|-------|-----------|
| 전체 공공조달규모(조원) | 141.3 | 160.0 | 175.8 | 125.4 |
| - 물품 | 55.5 | 59.8 | 64.5 | 45.7 |
| - 공사 | 58.0 | 67.4 | 72.5 | 51.4 |
| - 용역 | 27.8 | 32.8 | 38.0 | 28.3 |
| 중소기업 공공구매(조원) | 91.3 | 105.8 | 115.0 | 82.9 |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 | | | 32,839억 원 |
| * 창업초기 기업 | | | | 15,465억 원 |

자료 : 조달청 온통조달, 공공조달통계

주 :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규모에 대한 총괄표, 공공조달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 통계 자료
 전체 공공조달 계약실적은 ' 15년부터 공공조달통계(온통조달) 집계치 사용
 조달청 중소기업 계약실적은 내자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에서 중소기업과의 계약실적을 의미
 하며, 외자, 비축사업, 조달지원사업을 제외한 실적임

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 ② 상용화 전 시제품
- ③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 ① 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 ②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 II)-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III)-NET·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 각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혁신시제품 공급자 제안형 지정 분야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등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기타 정책지원 분야 :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산단
⑧ 그린 리모델링 ⑨ 그린에너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⑪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등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지정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
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②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②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
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2단계평가(혁신성 평가, 적합성평가)
→3단계지정(혁신시제품평가 혁신장터에 등록)→4단계 구매(수요기관 직접구매
시범구매사업 신청)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
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2단계 평가(도전적 과제 선정)

3단계 공고(선정과제, 기업대상 솔루션 공모)

4단계 구매(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 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 사용 절차>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 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 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

□ 혁신성장 · 정부 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

○ 혁신조달 구매 규모 확대 및 참여 활성화

(규모) 혁신제품 구매예산을 전년(293억 원) 대비 52% 증가한 445억 원 책정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도 (' 20) 159 → (' 21) 350개 이상 확대(누계기준)

* 참고로, 정부 전체 혁신제품 (' 20) 345 → (' 21) 800개 이상 확대

(운영방식) 혁신수요 제안 등을 폭넓게 개방하여 혁신조달 참여 활성화

공공기관 이외에 '국민·민간기업' 에도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혁신수요 제안 허용

'물품' 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공사' 수반 혁신솔루션까지 확대,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셋 등 SW분야까지 확장

한국판 뉴딜 등 정부사업에 부합하는 혁신제품 수요 발굴·지정

* 탄소중립(Net-Zero), 타부처 신기술사업화 사업 등과 혁신조달 연계

○ 본격적으로 혁신조달을 공공부문에 확산

○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확대

- 기술적 확보 수준이 높으나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 초기판로확보를 용이하도록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활용
- 향후 민간시장의 개척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공시장에서의 실효성을 입증받아 공공시장 납품이력을 통해 민간시장으로 확장
- 공공수요에 기반한 신공공서비스 창출을 통해 새로운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화 촉진
- 공공수요 발굴과정에서 국민서비스 디자인단과의 연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투자와의 연계 필요